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

신뢰와 권위 갖춘 ‘지역 큐레이터’ 돼야

박민 / 참여미디어연구소장

신문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부터 신문사가 현격히 줄어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을 일컫는 ‘뉴스 사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 언론사가 뉴스 사막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뉴스미디어 환경과 공간적 제약, 뉴스 가치 등을 통해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해본다. 편집자 주

2010년 호주의 미래학자 로스 도슨(Ross Dawson)은 2017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영국은 2019년, 한국은 2026년, 일본과 중국은 2031년, 204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도, 남미 등의 국가에서 종이신문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0년 29%였던 종이신문 정기구독률은 2017년 9.9%의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¹⁾ 그뿐이 아니다. 알파고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기자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된 ‘앞으로 20년 내 사라질 직업 리스트’ 중 저널리스트는 4위로 꼽히기도 했다. 심지어 수년 안에 로봇저널리즘이 풀리처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²⁾ 사실 이런 미래에 대한 경고는 제

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1995년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1세기 내에 세계 전체에 필요한 재화 생산에 인간 노동력의 2%만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살아남을 직업은 기업가, 과학자, 기술자, 프로그래머, 교육자, 컨설턴트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지역 언론이 설 자리가 있을까?

뉴스미디어가 사라진다면?

미디어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부터 기존 견해를 강화할 뿐이라는 소극적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사회의 질서와 존립에 필요한 핵심 담론을 공유하고 내면화하는데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뉴스미디어는 민주주의 자체의 지속성과 연결된다. 이는 뉴스미디어가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뉴스미디어가 없다면 정부와 시민의 연결고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난이나 갈등의 시기에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경우에 따라 불가

1) 박윤섭, ‘박윤섭의 포토인- 불타는 뉴스와 신문멸종 시간표’, 한겨레신문, 2018. 11. 06.

2) 송길영, ‘상상하지말라’, 북스톤, 2015, 118쪽.



2018년 ‘뉴스 사막의 확산’을 발간한 노스캐롤라이나대 페넬로페 애버내티 교수
©연합뉴스

능해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선거에 출마했고,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알 길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일방적인 정치 광고는 존재하겠지만, 신뢰성 있는 게이트키퍼의 부재에 따른 위기감은 심화될 것이다. 페넬로페 애버내티(Penelope Abernathy) 교수는 《뉴스 사막의 확산(The Expanding News Desert)》에서 뉴스미디어가 사라지는 지역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문사가 하나도 없는 지역부터 신문사가 현격히 줄어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인 ‘뉴스 사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매체 간 경쟁을 심화시킨 탓이다. 문제는 ‘뉴스 사막화’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뉴스 사막’ 분포를 보면 지역 편차가 아주 큰데, 절반에 가까운 91개 카운티가 비교적 가난한 남부에 몰려 있다. 뉴스 사막 지역의 빈곤율은 18%로, 미국 전체 평균 13%를 훨씬 웃돈다.³⁾ 스탠퍼드대 제임스 해밀턴(James Hamilton) 교수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신문 구독률이 낮고 이로 인한 정보 빈곤은 투표율까지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⁴⁾ 실제로 지역민의 지역 정보 인지도와 지역신문의 가구 구독률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⁵⁾ 뉴스 사막화가 지역 정보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상성’의 공간적 제약

‘뉴스 사막’의 원인은 결국 매체 간 경쟁에 따른 이용자 감소 및 수익성 악화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의한 잠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언론사가 ‘뉴스 사막’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소위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나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이 출현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리적 공간 개념(가령,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경계)에 근거한 지역 언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역 언론은 모두 사라질까?

하지만 이는 ‘장소’가 가진 여전한 구속력, 즉 장소의 정치성을 외면한 결과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범주별로 분류했을 때, 노동, 주거, 급양, 여가, 교육, 공동생활이 기본적인 6대 기능이고, 여기에 각 기능을 연결시켜 주는 교통통신 기능이 덧붙여진다.⁶⁾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는 이러한 기본 기능들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을 해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86곳의 퇴직자 1,384명 중 희망 퇴직자는 총 693명으로 퇴직자 두 명 중 한 명이 희망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만일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한

3) 류동협, <뉴스 사막의 확산: 문 닫고 흡수되고...지역 언론 붕괴, 민주주의 위협 우려 목소리>, 《신문과방송》, 2018년 12월호.

4) 류동협, 위의 글.

5) 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6년도 매체별 가구구독률 현황>, 2006.

6) 김부성, <독일 사회지리학의 발달 및 특색에 관한 연구>, 《고려대사대논집》, 16권, 159-175쪽, 1991.

7) 임영호, <혁신도시 이전기관 희망퇴직자...광주전남 최고>, 광주CBS, 2015.10.28.

시공간의 해체가 사실이라면, 이들이 실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명퇴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2006년 영국 오프콤(Ofcom)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은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에 의해 복제될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서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며 독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앙지보다 지역신문을 구독하며, 라디오 청취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역 라디오를 듣는다. 또한 지역사회가 사회 변화에 현저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출생지 인근에 살고 있고, 평균적으로 14마일(약 22.5km) 이내에서 이사를 다녔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및 비즈니스에 의존하고 있다. 일상 시설의 대부분은 2~3마일(약 4.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이는 인간이 일상생활을 펼쳐가는 데 있어 공간적 제약을 가져오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⁹⁾ 우선 능력제약(capability constraints)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능력(수면량 등과 같은 생리적 조건, 교통통신 수단과 같은 도구 이용 능력)과 이들 개인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능력 등이 개인의 활동을 제한한다. 두 번째는 결합제약(coupling constraints)이다. 개인이 생산, 거래, 소비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 도구, 물리적 설비와 결합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권위제약(authority constraints)으로, 능력제약 차원만을 본다면 활동 가능한 시공간 범위인데도 사회적 또는 개인적 권위(법, 규칙, 관습, 기대 등)에 의거해서 특정한 시공간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접근을 제약하고 그 안에서의 수행 양식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는 제약이다.

“

경주 지진 당시 방송사들 가운데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보도로 긴급 전환한 곳은 없었으며, 심지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1 TV는 1차 지진 발생 당시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를 방송한 데 이어 8시 25분부터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을 그대로 내보냈다. 반면 지진 상황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지역 케이블TV방송이었다.

”

뉴스미디어의 공간적 제약

이는 뉴스미디어가 갖는 공간적 제약 요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뉴스가 가진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언론은 ‘세계화’에서 예외적인 영역이다. 가령, 한국의 공영방송(KBS, MBC)이 미덥지 못하다고 일상 정보를 영국의 BBC에서 구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신문이든 방송이든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의 가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을 벗어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뉴스는 결국 자신의 삶에 얼마나 관련돼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전국 단위 매체와 지역 매체 사이에도 통용된다. 지역 밖의 뉴스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더 중요하다. 장호순(2015)은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의 가치는 세계화될수록 낮아지고, 지역화될수록 높아진다면, 신문의 가치

8) Ofcom, <Digital Local: Options for the future of local video content and interactive services>, 19 January 2006.

8) 김용창, <생활공간의 관점과 생활세계의 식민화, 한국공간환경연구회(편)>, <세계화시대 일상공간과 생활정치>, 대운, 1995.

를 결정하는 뉴스의 속성은 신문의 배포지역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전 세계 유료 일간신문의 평균 발행부수가 4만 8,000부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⁰⁾ 뉴스 가치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뉴스의 필요성이나 중요도 측면에서의 지역 제한성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 보도의 경우다. 지역 단위로 시행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선거 보도에서 전국 신문과 전국 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다고 해도 그 많은 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민들의 요구와 필요,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실제로 2008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세 신문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지역 관련 의제는 불과 4.27%에 불과했다.¹¹⁾ 이마저도 대부분(60%)은 단순히 지역을 공간적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였으며, 무엇보다 지역 현안 관련 입장이 지역의 이해관계와는 정반대였다.¹²⁾ 이런 사례는 경주 지진이나 강원 산불 등 재난보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경주 지진 당시 방송사들 가운데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보도로 긴급 전환한 곳은 없었으며, 심지어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1 TV는 1차 지진 발생 당시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를 방송한 데 이어 8시 25분부터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을 그대로 내보냈다.¹³⁾ 반면 지진 상황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지역 케이블TV방송이었다.

1인 미디어 시대에도 지역 언론은 필요할까?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이 유지되고, 지역 정보 제공자로서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역 언론사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기레기’로 전락한 주류 언론을 대신해 1인 미디어와 독립 언론들이 주목받았던 촛불광장을 떠올려 보라. 게다가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주류 언론의 매개(媒介) 기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네트워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로서 수용자의 피로(choice fatigue)를 가중시킨다는 점은 그나마 위로(?)다. 다원적 미디어의 존재는 뉴스 큐레이팅(News Curating)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때문이다. 기술 기업의 이윤 극대화 욕망에서 비롯된 ‘필터버블(filter bubble)’이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지만, 그것이 선택피로를 회피하기 위한 수용자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는 전문적 저널리즘 기관이자 큐레이터(curator)로서의 ‘신뢰’와 ‘권위’다. 보도 자료나 베끼는 행태로는 설 자리가 없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 중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의 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밝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이자 이유이며 가능성이다. 📰

10) 장호순, <지역사회와 언론>, <주변인과 문학>, 2015.

11)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08년 조선, 중앙, 동아 사설 분석>, 2009.

12)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은 전체 사설 가운데, 1.67%(45건)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혁신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4대강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완화 및 중부세 개정, 행정구역개편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이들 세 신문의 지역신문 시장 점유율은 무려 72.8%(2006.6월 기준)였다.

13) 연합뉴스, <방송사 재난보도 부실에 분통…KBS 최선 다했다>, 2016.9.13.